

배터리전쟁 조기종결될 듯 ITC, LG화학 손 들어줬다

〈美 국제무역위원회〉

LG화학·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 승인 '예비결정' 내러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 최종 결정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결국 조기패소로 결정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각)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ITC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조기패소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기패소판결에 따라 앞서 3월초로 예정된 변론 등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LG화학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악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훼손하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 분쟁

- ▲2019년 4월
 - LG화학, 美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 ▲5월
 - 美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사 개시
 - LG화학, 경찰에 SK이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 ▲6월
 - SK이노,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 ▲9월
 - SK이노, 美ITC-연방법원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 LG화학-SK이노베이션 CEO 첫 회동 결렬
 - 경찰, SK이노 압수수색
 - LG화학, 美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맞소송
- ▲10월
 - 美ITC, SK이노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조사 착수
 - 美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SK이노 포렌식 명령
 - SK이노,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美ITC,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조사 착수
- ▲2020년 2월14일
 - 美ITC, LG화학의 SK이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SK이노에 '조기패소' 판결
- ▲10월 5일까지
 - 美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예정

연립뉴스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은 LG화학의 요

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의견서에서 조기패소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전국 휘발유 가격 3주 연속 하락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0.7원 하락한 /당 1천 552.6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1월 재정일자리 효과 역대 최대

최대 증가 60대, 단순노무·임시근로

올해 1월 재정 일자리 효과가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일자리 효과에 60세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늘어난 취업자는 단순노무·임시직에 집중됐다.

보건복지서비스·공공행정산업 취업자를 제외한 민간 취업자 증가폭도 1월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지만, 이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재정 일자리 효과가 집중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하 보건복지 서

비스)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하 공공행정)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9000명 늘었다.

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2014년 15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10만7000명, 2016년 6만6000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17년 11만1000명, 2018년 10만2000명, 2019년 16만명으로 확대한 뒤 올해 정점을 찍었다.

늘어난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는 60세 이상 단순노무 종사자와 임시근로자에 집중됐다.

1월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50만7000명으로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한용수 기자·연합뉴스 hys@



“경제야, 너도 점프해보렴”

눈이 내린 16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외국인 학생이 내리는 눈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취업 ‘똥똥’... 도소매·제조업중심 감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모든 연령 중 40대 감소폭 가장 커
도소매 4.8만명·제조업 4.4만명 ↓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40~49세) 취업 시장이 도매·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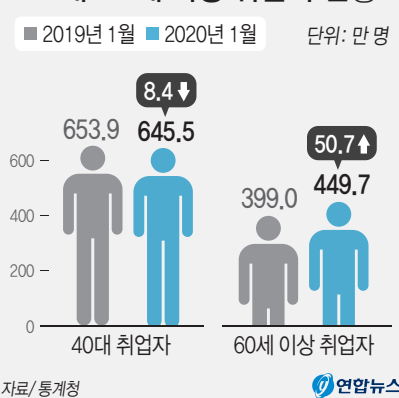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60대 일자리는 단순노무 종사자나 임시 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마이너스 40대

16일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40대 일자리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대 취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4만8000명, 제

40대·60세 이상 취업자 현황



조업에서 4만4000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6만8000명 증가하며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 감소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한 마이너스(-)를 나타낸 바 있다.

연령대별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로

비교해 보면 40대 일자리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40대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9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3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 각각 줄었다.

이러한 40대 자영업자 감소폭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컸다. 50대는 6만3천명 감소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자영업자가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자가 10만5천명 늘었다.

◆60세이상 일자리는 재정일자리로 늘어

60세 이상은 40대와 달리 최근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만7천명 늘어나면서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연합뉴스

공정위, 이해진 네이버 GIO 검찰에 고발

〈글로벌투자책임자〉

자료에 본인·친족등 소유 회사 누락
공정위 “계열사 대거누락 혼란 빚어”



자신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해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씨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LINE Corp.)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씨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즈,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론,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의거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민지 기자·연합뉴스 kmj@